민주 광주 '입당원서 지지후보 명기' 후폭풍

정치개혁연대 "비민주·불공정 공식 사과, 책임져야"

시당, 제출후보 명기 뒤늦게 철회 "편의 제공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지지 후보를 적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신규 당원 입당원서 지침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이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지지후보 명기', 즉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도록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는 비민주적 조치로 현역 의원에게는 기득권을, 정치신인에게는 불이익 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광주시당위원장은 공개 사과를, 담당 실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개혁연대는 지난 4일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광주시당의 온갖 비민주적 운영에 관해 중앙당의 특별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개혁연대 측은 "예비 입지자와 현역 의원 간 경선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지후보 명시는 또 다른 불공정 레이스고, 전국에서 광주만 유일하게 만든 규정"이라며 "시민과 당원들은 민주당이 검찰독재와 싸우지는 않고 집안 편가르기만 하더니, 결국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광주를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내부 총질" "발목잡기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당내 혁신투쟁을 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 소속 출마 예정자 2명과 개혁연대 소속이 아닌 민주당 소속 예비입지자 8명 등 모두 10명이 뜻을 같이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당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출(지지) 후보' 대신 '지역(선거구)'을 명시하도록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또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100장 이내의 입당원서만 제출 가능하고, 7월 14일까지 신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 지침을 바꿨다.

광주시당은 "정당법과 민주당 당헌·당규 취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입당원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입지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리접수 등을 인정했던 것인데, 오해 소지가 있어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지침 변경과 맞물려 입당원서 대리접수에 따른 불·탈법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선을 유도하기 위해 입당원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중앙당 지침에 따라 윤리심판원 제소, 형사고발, 예비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인정치인 차별과 관련해선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신인정치인들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며 불공정 경선 논란을 일축했다. /김도기 기자

尹, 이달 중 부처 차관 대거 교체할 듯

10명 이상 규모…국조실·기재부·국토부·통일부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대대적인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차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처는 10곳 안팎이 될 전망이다.

차관 교체는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부처별 핵심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다음날 당시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보냈다.

강 2차관은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원전 등 핵심 업무를 맡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참모 중 하나로 평가된다. 주무부처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차관급 인선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사례처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부처 차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과 부처의 인력 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전남도 동부청사 공무원 이주 지원비 형평성 논란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 통합청사 7월 개청을 앞두고 공무원 이주 지원 예산을 편성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8일 "전남도가 동부권 통합청사에 근무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주택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일부 공무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동부청사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청 소속 사업소나 직속기관으로 발령받은 공무원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주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의당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尹 지지율 1%p 하락 35%…부정평가 55%

경험부족·일방적·소통부족 등 부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30%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5~7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5%였다.

한 주 전(5월 4주차)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각 1% 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지지율은 70세 이상 65%, 60대 58%, 50대 32%, 40대 18%, 30대 24%, 20대 22%였다.

이념 성향별 지지율은 진보 16%, 중도 27%, 보수 61%였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결단력(16%), 공정·정의(6%), 일관성·신뢰(6%), 소통(5%) 등을 꼽았다. 다만 '잘하는 부분 없다'는 응답이 49%를 차지했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경험·능력부족(19%), 독단·일방적(16%), 소통부족(11%), 편파적(10%) 등을 지적했다. '잘못하는 부분 없다'는 응답은 13%였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8%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김진남 도의원 "상피제 무시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순천5)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부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민주 "尹, 日정부에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해야"

이용우 "그저 믿어달라는 건 종교인 것"

더불어민주당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가능성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준병 의원은 "1만100크렐 방사성 세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의 또 다른 징표"라며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에서 지난 5월 포획한 우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 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의 방사선 세슘을 검출했다고 도쿄전력이 이달 5일 발표했다.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방사선 세슘은 원전에서 나오는 인공방사성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세슘 자체가 잘 검출되지 ㅇ낳고 원전 주변이라도 가끔 수산물에서 한자리수 소베크렐이 검출된다. 그런데 1만8000베크렐이란 의미는 후쿠시마 바다 어딘가에 고농도로 오염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한다. 넓은 바다에서 잘 희석될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이 이 아까운 물을 왜 바다에 버리나.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직접 사용하거나 일본 하천에 방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 안전과 생명, 어민들 생존 보호를 위한 정부의 태도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괴담이라 주장하고, 정부는 틈날 때마다 과학적 검증을 강조한다. 그런데 과학적 검증은 어떤 모델, 기준을 놓고 어떤 자료를 넣어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과학적 검증이라고 한다. 과연 후쿠시마 시찰단이 그걸 공개한 적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시 물러나겠다"

KBS 김의철 사장, 대통령 면담 요청도

KBS 김의철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실이 이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KBS는 지난 세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외풍에 시달렸다. KBS 구성원은 공영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이번에 무거운 결심을 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KBS 미래와 발전을 위한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 유관 부처에도 제안한다"며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KBS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청했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월9일부터 한 달간 부친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019명(3.5%)에 그쳤다.

'子 학폭 논란' 이동관 "졸업 후에도 친한사이…왜곡·과장"

출입기자들에 입장문 "사실관계 떠나 송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제 자식이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正道)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내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하니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특보는 2011년 1학년 재학 당시 아들과 같은 반 학생 A군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과 A씨는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호매만평

이태헌